

# ‘문책 카드’ 이상민·윤희근 경질론... 與 내부는 온도차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정부 ‘이태원 참사’ 대응 여론 악화... ‘이상민 거취’ 친윤-비윤 의견 분분  
지도부 “先 수습” 신중... 당내 차기총선 위기감에 “총리까지 책임 물어야”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점이 연일 드러나면서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에서 어떠한 문책 카드를 제시할 것인지 주목된다. 여권의 문책 범위와 강도에 따라 정국의 향배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권 내부적으로는 책임론에 대한 온도차가 다른 측면도 있어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내부에서는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강력한 문책 카드가 필요하다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등 여권 핵심부의 의지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문책의 수위와 범위가 가닥잡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겠냐”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금 책임이 있다고 언급되는 분들이 수습의 책임도 동시에 있기에 어느 정도 사태 수습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문책과 책임이 논의될 것”이라며 책임 범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가 문책에 대한 언급을 공개적으로 하기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여야 공히 책임 추궁 대상으로 거론하는 이상민 행안장관을 이를 연속 대동하고 분향소를 조문한 것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그럼에도 당내에서는 상당 폭의 인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112 신고

녹취록’ 이후 경찰 총동 대처에 대한 여론이 악화할 대로 악화된 만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지휘계통에 대한 경질은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이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윤 청장의 경질론에 대해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윤 청장도 사실상 사의를 보이고 있다”며 경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두고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다.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장관 역시 국가재난관리의 총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잇단 실언으로 구설에 오른 데 대한 책임 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심 수습을 하려면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적 충격이 큰 상황에서 대중 넘어간다면 오히려 후폭풍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당내 친윤계 등에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기로 잘 알려진 이 장관의 거취를 거론하는 것이 남감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야권의 공세에 밀릴 수만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친윤 성향의 여당 인사는 “여론이 부담스럽기는 하다”면서도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당·정·대가 새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은 물론 한덕수 총리까지 책임을 묻는 대폭적인 문책 인사에 나서야 돌아선 민심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선제적 조치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차기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으로



윤 대통령 ‘경질설’ 이상민과 조문 동행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7사째인 3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조문하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김대기 비서실장(가운데)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풀이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차기 총선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생 경제도 위기인데다 이태원 참사까지 겹치면서 민심의 흐름이 좋지 않다”며 “과감한 인사 조치 등이 없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지방정가 라운지

### “광주 미디어아트페스티벌, 지역 업체 참여 못해”

박희율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광주시의회 박희율(민주·남구3) 의원은 3일 “10번째 진행되고 있는 광주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에 광주지역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운영 노하우 등 빅데이터 구축은 지연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12년 첫 행사를 한 뒤 2019년까지 광주 문화재단에서 기획·운영했지만, 2020년부터는 광주시가 직접 위탁업체를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사를 10년 동안 타 지역 업체가 맡

고 있는 것은 광주시가 그동안 미디어아트 분야의 인적·물적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축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결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지역 업체 참여를 위해 지역제한 입찰 방식을 검토했지만, 사업비가 3억3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 제한이 불가하다”며 “부득이 전국 단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용역 결과 신뢰 못해”

이귀순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광주시의회 이귀순(민주·광산4) 의원은 3일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지난해 광주전남연구원에 의뢰한 2038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연구 용역에서 제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인구 표본에 맞지 않는 등 용역 결과 전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동유치를 하려면 주민 설문조사가 매우 중요한데, 인구 표본 추출을 보면 광산구 17%, 북구 21%, 남구 15%, 서구 29%, 동구 16%

등 인구 비례가 맞지 않았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찬성하는 연령도 20대가 가장 많아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광주시는 8천만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같다”며 “용역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

## 무너진 보고체계 ... 총경 2명 수사 전환

이태원 참사 당일 녹장 보고

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지휘부 보고를 늦게 한 책임을 물어 총경급 경찰 간부 2명을 대기발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서울경찰청 류미진 인사교육과장(총경)과 현장 책임자인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총경)이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을 확인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참사 당시 현장과 112상황실에서 경찰 지휘부로 향하는 보고가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이 수사로 본격 전환한 셈이다.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상황관리관으로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을 대리해 서울경찰청장에게 치안 상황을 보고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경찰청 상황실에도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류 총경은 치안 상황을 총괄 관리·보고할 의무를 게을리 해 참사를 뒤늦게 파악하고 녹장 보고를 한 사실이 감찰에서 확인됐다.

이 총경은 사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서 현장을 총괄할 의무가 있는데도 뒤늦게 도착해 지휘 관리를 소홀히 하고 보고도 지연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청은 전날 이 총경을 대기 발령하고 이날 업무태만을 이유로 류 총경과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이 총경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참사 발생 1시간19분 뒤인 11시34분 처음 보고했다. 당시 집에 있던 김 청장은 이 전화를 받지 못해 2분 뒤인 11시36분 용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참사를 처음 인지했다. 사고 발생 1시간21분 만이다.

류 총경과 이 총경의 녹장보고 탓에 김 청장은 물론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이어지는 경찰 수뇌부가 2시간 가까이 상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연합뉴스

## “병력 있었는데 미투입”

이형석 경찰청 자료

이태원 압사 참사 당일 저녁, 참사 현장 인근에서 서울청 소속 기동대 1개 부대가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참사 발생 전 시민들의 112 신고가 이어지는 동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용 가능한 경찰 병력이 있었지만,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0월 29일 경력운용 계획’에 따르면, 참사 당일 경찰은 용산 전경기념관 인근 집회 대응을 위해 서울청 소속 기동대 3개 부대를 배치하고, 익일 오전 8시까지 근무하는 야간 대기조로 기동대 1개 부대를 배치하기로 계획했다. 야간조로 편성된 서울청 기동대 1개 부대가 녹사평역과 삼각지역 인근에서 대기 근무를 했다. 11건의 ‘압사 우려’ 신고가 이어졌지만, 이 기동대는 현장 인근에서 대기 근무를 선 셈이다. /오광록 기자 kroh@

# 상가, 신축부지 매매

1. 대인동 156평, 롯데백화점 옆  
신안동 176평, 엄마요양병원 뒤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4. 매매 - 협의
5. 공동투자 하실분 모심

문의. 010-3605-5000